

입법정책정보

-제9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건축법 시행령	1
2. 교육기본법	5
3. 국민체육진흥법	8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0
5.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11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5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15
2.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7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9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4

I 상위법령 제 ·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략)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⑩ (생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⑩ (생략)

⑪ 허가권자는 제10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⑫ ~ ⑬ (생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⑦ (생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하. (생략)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

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4. ~ 10. (생략)

② ~ ⑤ (생략)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7. 14.] [대전광역시조례 제6069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24조(가설건축물) ①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4. 목재, 알루미늄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공연장 매표소로서 연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방범시설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에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7호, 2023. 9. 14.,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시행 2016.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4850호, 2016. 12. 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로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
3. 진로교육의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진로상담사, 진로전담교사 등 진로교육 지원인력을 둔다.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진학정보 제공
2. 진로체험 운영·지원
3. 진로심리 검사 및 진로·진학상담 제공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진로교육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
4.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전

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및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 · 이용되어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 · 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 2022.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1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3. 노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

□ 제정 · 개정 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43조(준용 규정) ①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13호, 2023. 9. 1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기관등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 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23. 8. 11.] [대전광역시조례 제6075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9. 6.]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835호, 2023. 9. 6., 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전세피해 입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조례 제7조의 지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청자는 한 차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

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2. 이사비 지원 신청서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마.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3. 월세 지원 신청서

-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 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제4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료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의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기관에 6개월마다 확인한다.

제5조(이사비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하고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월세 지원) 구청장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한다.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료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이 해지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구청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원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1.]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23호, 2023. 9. 1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시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등의 역할 등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함. 또한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의 계속성과 관리·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회 견학 및 방청

2.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의견23-0268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의뢰안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같은 법상의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고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이하 “의상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강릉시가 의상자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사상자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가’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상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례로 의사상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의사상자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할 것인바, 먼저 의사상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의사상자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상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상자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강릉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의견23-0269 / 요청기관: 전라남도]

□ 의뢰안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약국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을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으로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인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임차료와 같은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

□ 주요내용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로정보시스템(PRIS)에 따르면 2023년 9월 4일 기준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93기에 달한다. 미국 전역의 원자로는 연방정부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규제를 받는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NRC의 허가 취득이 필수이다.

NRC에서 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규칙안의 관보 게재를 전후로 사전 준비 과정과 입법 과정으로 나뉜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는 NRC가 자체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보거나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며, 규칙의 타당성 분석서와 규칙의 초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안한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는데, 이때부터 본격 입법 과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관보에 게재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뒤 확정 규칙을 NRC가 승인하고 나면 이를 시행일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상기 절차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NRC는 입법 절차 중에 있는 규칙의 목록을 제공한다. 9월 1일 자 목록 중 올해 하반기 추진 일정이 잡힌 원자로 관련 규칙 계획의 사례 3건을 소개한다.

○ [사례 1]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방재 대책 요건

- 안전번호/현 단계: NRC-2015-0225 / 입법 과정(확정 규칙 발표 임박)
- 계획 발표일: 2016. 6. 22.
- 규칙안 관보 게재일: 2020. 5. 12.
- 확정 규칙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1. 3. (*8월 14일 자 보도자료 제23-048호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발표 예정)
- 주요 내용: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및 그 밖의 신기술에 대한 방재 대책 요건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

O [사례 2] 선진원자로 자율 규제 방안 신설

- 안전번호/현 단계: NRC-2019-0062 / 입법 과정(규칙안 관보 게재 임박)
- 계획 발표일: 2020. 10. 2.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2. 23. (기존의 2023년 8월 말에서 약 6개월 연기)
- 주요 내용: 신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자율 규제 방안으로서의 위험성과 성능 평가 방법을 가급적 다양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

O [사례 3] 경수로의 기존 핵연료 및 사고저항성핵연료 농축 한도

- 안전번호/현 단계: NRC-2020-0034 / 사전 준비 과정
- 계획 발표일: 2022. 3. 16.
- 규제 타당성 보고서 발표 예정일: 2023. 9. 15.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5. 6. 16.
- 주요 내용: 기존 원자로 허가를 소지한 자가, 사고저항성핵연료(AFT)와 같이, 현행 우라늄-235(U-235) 농축 한도(5%)보다 높은 농도가 필요한 핵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 공공누리 제1유형, 2023.